

## 투명한 숫자: 예속을 넘어서

이 관 수\*

### I.

자유는, 흔히들 꿈꾸는, 자연법칙들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자연법칙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이해에 덕분에 가능한, 자연법칙들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 엥겔스, “자유와 필연,” 『반듀링론』<sup>1)</sup>\*

우리의 행위가 자연법칙들의 철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엥겔스의 꿈은 아마도 상상가능한 최고의 자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꿈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인식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자연에 내재한 그 무엇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나 불완전하다.

아마도 엥겔스의 대책점 부근에 위치할 J. S. 밀의 주장도 인간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

\* 동국대학교

1) 엥겔스, 김민석 역 『반듀링론』(새길, 1987), 125를 고쳐 인용함.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때”라는 조건이 언제 성립하는지 알 수 있을까?<sup>2)</sup> 무리생활을 하는 포유동물들을 들여다보면, 한 개체의 번식과 생존 가능성은 무리의 처지에 좌우되고, 무리의 성쇠는 다시 개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한 무리의 성쇠가 특정 개체의 이해관계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무리가 타격을 입을 때야 비로소 번식가능성이 높아지는 개체들도 자주 관찰된다. 하물며 분업과 교환의 그물망으로 엮여 있는 호모 사피엔스 무리에서야!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면 수많은 도산과 실직이 닥쳐올 것이 분명하다. 피스톤 제작자들의 숙련은 무용지물이 된다. 아프가니스탄 농민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재배한 양귀비는 누군가의 인생을 파멸시킨다. 내가 섭취하는 오늘의 식단이 어제 계약을 맺은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작은 변위야 지금은 무시당하고 있지만, 정보를 가공하고 확률을 계산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값싸지고 있다. 지금 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거나, 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만 알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것이 그렇지 않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궁극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은 -물론 그런 진리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경계했지만- 밀은 언젠가는 진리에 비추어 정당한 이해관계와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진리의 독점을 거부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밀식의 자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믿기는 힘들다.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고서는 한 개체의 이해관계를 산정하는 척도와 기준시간(또는 시간간격)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비롤리가 『공화주의』에서 제시한 공화주의의 이념이 매력적인 것은 무리생활의 필연성, 즉 무리를 이루는 개체들은 서로의 간섭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한다는 데 있다. 또한 이해관계를 판별하는 궁극적인 기

2)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자유론』 (책세상, 2005), 175.

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예속, 즉 타자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엥겔스와 밀의 꿈에 비하면 훨씬 현실적이고, 궁극적인 진리(의 인식가능성)의 부재라는 엄혹한 현실에서도 더 잘 견디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가능한가?”이다.

## II.

물리적 폭력에 기초한 자의적 지배는 대체로 줄어들었다. 적어도 어엿한 근대국가에서는 개인이 물리적 폭력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극적으로 감소하였다. 2차대전기의 사망률도 부족사회의 피살률에는 못미친다. 하지만 자의적 지배의 수단이자 결과인 공포는 줄어들었을까? 역사학자인 맥닐이 지적했듯이 교환경제는 삶의 불안정성 또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다.<sup>3)</sup> 사실 이 점만큼은 역사를 돌이켜 보지 않아도 분명하다. 세계적 교환의 긴밀한 연결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9.11같은 사건이 한국인의 삶에 충격을 줄 수 있을까? 18세기 였다면 불가능하였을 일이다.

자의적 지배를 혐오하고 법치를 요구하는 이유 중에는 공포가 있다. 지배자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공포, 겉보기에 자유로운 교환인 듯한 거래가 상대방의 변덕이나 내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보복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공포. 이런 무지가 불러 오는 공포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행히, 궁극적인 무지는 아닐지라도, 현실적인 무지를 줄이는 방법을 인간은 개발해 두었다. 언뜻 보기에 무질서해보이는 현상들로부터 적어도 집단적인 질서를 인지해내는 집계와 통계가 그것이다. 그것들은 한 인격의 변덕 앞에서는 무력하지만, 그런 인격도 어쩔 수 없는 한계조건들에 대한 무지는 줄일 수 있다. GNP, 실업률, 출산률 등등 개인이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정보를

3) 윌리엄 맥닐, 『전쟁의 세계사』(이산, 2005).

창조해내고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말했듯이 모든 유용한 추상화는 불완전한 추상화(leaky abstraction)이다.<sup>4)</sup>

한때 관료적 중앙계획에 회의적이었던 보그다노프는 SF인 『붉은 별』에서 화성의 공산주의 사회를 상상하였다.<sup>5)</sup> 그 상상에서 생산은 광장에 세워진 탑에 표시된 정보를 보고 각 개체가 알아서 자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탑에는 물품별로 필요량과 부족량등이 표시되는 데, 발달한 과학기술 덕분에 즉시 그리고 시시각각 정보가 갱신된다. 그의 묘사는 언뜻, 정보에 기초한 개별적인 의사결정들의 총체라는 면에서, 정보화 사회를 연상케 한다. 그 와동시에 현대의 우리는 그런 집계가 얼마나 추상적인지, 개체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버려버린 것인지를, 즉 보그다노프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 III.

통계수치와 전문용어의 유용함과 허망함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여러 책들이 출판되었으니 굳이 되풀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실정치에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더 관심이 가고, 또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숫자와 숫자의 표현방식이 현실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간단한 사례로 지난 정권 시절에 여러 해 반복되었던 담론 “GDP가 늘었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GNI가 감소하였다”를 돌이켜보자. 이를 “국민총생산은 늘었지만 사오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떨어졌다”로 달리 전달되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전문용어가 전달하려는 엄밀한 의미는 일부 사라졌지

4) 조엘 스폴스키, 『조엘 온 소프트웨어』 (에이콘, 2005), 263-272.

5) A. Bogdanov, *Red Star : the first Bolshevik Utopia*, ed. Loren R. Graham and Richard Stites, trans. Charles Rougle (Indiana Univ. Press, 1984).

만, 전문가가 아닌 대다수 국민, 즉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그렇다면 각 정파의 대응과 정치 지형은 약간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최소한 교역에 생존이 달려 있는 우리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숙고하는 차원에서 정치행위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스미스가 말했듯이

... 국가는 그들을 교육시킴으로서 적지 않은 이득을 얻고 있다.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식한 국민들 사이에서 종종 가장 무서운 무질서를 낳는 광신·미신에 덜 빠지게 된다. [중략] 정부의 안전이 정부의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호의적 판단에 매우 크게 의존하는 자유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행동을 성급하거나 변덕스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확실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니 말이다.<sup>6)</sup>

그래도 GDP-교역조건-GNI 문제는 필요한 정보의 최소량은 전달하였다. 하지만 얼마 전 벌어진 수능성적공개사건들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수치들이 난무한 사건들이었다. 자유기업원 웹사이트에 게재된 칼럼의 주장대로 “수능성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자는 얘기는 우리의 교육 현황과 학생들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지 말고, 그대로 물어”두자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현재 다니거나 미래에 다닐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상을 알고 싶어 한다.”<sup>7)</sup> 그런데 공개된 정보는 고작 수능평균성적 및 1등급 학생 비율 상위 100개교이거나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 지도’에 불과하였다.<sup>8)</sup> 그 어느 것도 공포를 줄이고, 투명한 예측의 개연성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6) 애덤 스미스, 김수행 역, 『국부론』 개역판 (비봉, 2007), 965-6. 필자 강조.

7) “수능성적공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772103055&pn=1&idx=17794>>  
2009.10.20일 접속.

8) 100개교 순위는 “수능 국영수’ 대원외고 1위, 민사고2위” 조선일보 2009.10.12일 1면등을, ‘교육 불평등 지도’는 <<http://pressian.ofscdn.com/D2/2009/10/file1.pdf>>를 참조.

먼 불투명한 수치들의 향연에 불과하였다. 당연히 이러한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들이 있었고, 그렇게 보도되었다.<sup>9)</sup>

사실 이런 결과는 그 어떤 분석과도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교육부가 제공한 수능성적 원자료라는 것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표면적인 결과만 있는 자료로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전망은 불가능하다. 교육의 목적이나 지필고사가 학생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느냐 학생의 실력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변수는 무엇이나 같은 원론적이고 일부 수치화할 수 없는 의문들을 제쳐 놓아도 그렇다.

내 아이 또는 나에게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디냐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최소한 이나마 답하려면, 내 아이와 비슷한 다른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물으면 된다. 즉 비교할 때는 최대한 비슷한 경우와 비교하는, 원초적일 정도로 상식적인 방식이면 된다. 이를 지표로 바꾸어 따지면, 개인 별로 중학교 졸업시의 내신등급과 수능시험에서 획득한 등급을 비교한 집계자료를 보면 된다. 물론 이런 지표들만으로는 한계가 많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안함만 가증시키는 상황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력과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저렴하게 생산가능하다. 고교등급제 실시나 사교육 제한이니 자료는 없고 담론만 난무하는 상황을 벗어날 길을 열어준다.

결과를 열어 보기 전에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뜨거운 감자인 특목고 문제도 많이 완화될 것이다. 분류와 통계의 기본 특성상 중학교 내신 1등급인 학생들을 많이 확보한 고등학교일수록 그런 학생들이 수능1등급을 못받는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0)</sup> 혹 일부 특목고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

9) 연합뉴스, “‘고교별 수능성적 오류’ 지적…논란 재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1/15/0200000000AKR20091115033700004.HTML?did=1179r> 2009.11.15 송고. 2009년 11월 20일 접속.

10)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David Wainer, *Graphic Discovery* (Princeton Univ. Press, 2005)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나지 않는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곳이야 말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특성을 지닌 곳일 것이다. 또 평범한 중학교 내신에서 출발한 학생이 상대적인 성적향상을 가장 많이 얻어낸 곳도 발굴가능하다. 추가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학생의 교육성취도에 관계하는 주요 변수(부모의 경제력, 학력수준 등)과도 맞추어 본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할 개연성이 높은 선택의 폭이 지금처럼 정보가 제한된 상황보다는 더 넓어지지 않을까?

#### IV.

예측거부를 추구하는 공화주의적 원리는 적어도 밀식의 고전적 자유주의보다는, 이해관계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인간 인식의 한계상황과 덜 모순을 일으킨다. 하지만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현대인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는, 최소한 눈앞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덕성을 잠시 잊는 것인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이런 상황으로부터의 탈출구는 이미 알려져 있다. 기억이 있는 반복게임을 시행하면 집단의 이익과 개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택의 비율이 높아진다.<sup>11)</sup> 그리고 사회적 기억을 우리는 수치로 요약한다. 수치가 투명하다면 예측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누군가의 자의적 변덕에 휘둘릴 개연성도 줄어든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제한하는 법”은 인간이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초월한 자연적 법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률을 모르면 법의 지배 또한 인격적 지배로 전락할 수 있듯이 자연적 법칙(의 시초)에 대한 정보를 제한한다면 공포에 쫓긴 자발적 예측이 벌어질 수 있다.<sup>12)</sup>

11) 흥미롭게도 이는 개체의 이기성을 정당화하였다고 오해되는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주요 논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법치의 영역을 “자연적 법칙”에까지 확장시켜 사고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것을 인간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자연과 인문의 경계선이 과도하게 뚜렷한 우리나라의 풍토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겠다. 첫째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결정론적 자연법칙인 뉴턴의 운동법칙조차도 미분법칙이라는 점이다. 미분법칙들은 대상전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부분들 사이에서의 순간적 또는 일회적 상호작용만을 기술한다. 그러한 상호작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자연법칙만을 통해서 일의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계에서도 무척 힘들다. 결정론적 미분방정식만을 사용하는 기상학 연구에서 “나비효과”의 아이디어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즉 자연법칙-현실적으로는 법칙 수준에 이르지 못한 통계적 결과를 포함하더라도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뿐이지 선택을 일의적으로 고착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둘째로, 장려와 억제를 막론하고 자의적 개입을 경계하였던 스미스의 언급을 보자.

그러나 우수한 교사의 통상보수는 변호사·의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사의 직업은 공공의 비용으로 교육받은 가난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반면에, 변호사·의사의 직업은 자기 자신의 비용으로 교육받은 매우 적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이러한 불균등[즉, 약간의 업종에서 경쟁을 자연적으로 가능한 것 이상으로 격화시킴으로써 노동·자본의 각종 사용처의 유리성·불리성 전체에 대해 야기하는 불균등]은 대체로 국민 대중에게 해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것이다. 이 불균등은 공공의 교사의 직업을 약간 타락시켰지만, 학문적 교육의 염가성은 이 작은 불편을 크게 보상하고도 이익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

12) 물론 이러한 예측은 비인격적 예측이라고나 표현가능할 것이다. 모순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유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13) 스미스, 앞의 책, 172.



다.<sup>14)</sup>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을 지닌 일부 현대의 논자들과 달리 그러한 광신을 지니지 않았던 스미스는 소위 “수요공급의 법칙”을 미분법칙으로 취급하였다.<sup>15)</sup> 그에게도 법칙은 맹신이나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를 좀 더 잘 예측하고 목적을 실현시키기는 방도를 찾기 위한 수단이다. 스미스가 말했듯이 학문적 교육은 한 사회의 이익이 된다. 학문까지야 바라기 힘들지라도 최소한 투명한 수치에 기초해서, 상식적인 추론을 통해 발견된 잠정적 규칙성 또한 공포를 줄여나갈 수 있다.

---

14) 스미스, 앞의 책, 175-6. 필자 강조.

15) 『국부론』의 1편 7장 “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을 보면 수요과 공급의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스미스에 따르면, 불일치가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자연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다. 즉 시장법칙이 작동하더라도 한 사회의 완벽히 효율적인 자원배분상태는 도달되지 않는다. 이는 물체들의 간의 모든 역학적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뉴턴 운동법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거시적인 개별 물체가 뉴턴 운동법칙을 정확히 따라 운동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